



미국 : 스타벅스의 반노동 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북미 노동조합 연합체인 전략조직센터(SO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스타벅스 측이 반노동 캠페인에 지출한 비용 약 2억 4천만 달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SOC는 스타벅스에 2024년 연례 회의 전에, 관련된 비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¹⁾ 이 비용에는 소송 비용과 노동시간 손실 및 노동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 모두 포함된다.

SOC는 스타벅스가 1억 달러의 법률 비용을 포함해 반노동 활동에 총 1억 5,3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나아가 “임금 및 팁 불법 거부”와 “불법 해고 및 매장 폐쇄” 등의 혐의로 8,70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SOC는 스타벅스 이사회를 구성하기 전에 투표권을 가진 주

주들이 이러한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회사가 반노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스타벅스는 모든 SEC 및 노사 표준 사무국(OLMS)의 보고 요건을 준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수익의 20% 이상을 임금 인상, 교육, 신규 장비 등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SOC는 3월 스타벅스 연례 회의의 주주 투표에서 3명의 이사 후보를 내세워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었으나, 주주 투표 일주일 전에 계획을 철회했다.³⁾ 사용자 측과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이 복리후생 및 단체교섭 체계에 관한 합의를 이루면서 이사회 투쟁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 1) Reuters, “Union-backing Shareholder Asks Starbucks to Disclose ‘Anti-union Spending,’ Approaches SEC”, 2024.2.17.
- 2) Forbes, “Labor Group Alleges Starbucks not Disclosing Costs of ‘Anti-union’ Behavior to Shareholders”, 2024.2.16.
- 3) Axios, “Labor Group Withdraws from Starbucks Boardroom Battle”, 2024.3.5.

미국 : 공동 고용주 범위 확대, 벽에 부딪히다

미국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규칙이 압초에 부딪혔다.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판사인 J. 캠벨 바

커는 NLRB의 새로운 공동 고용주 규칙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¹⁾ 이 규칙에 반대했던 경영계의 미국 상공회의소는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NLRB 의장인 로렌 맥페란은 실망스럽다는 반응



을 보이며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NLRB가 새로 추진한 공동 고용주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 스케줄, 징계, 감독 등 노동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 통제권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없이 해당 회사를 노동자의 '공동 고용주'로 분류한다.²⁾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게 된다. 그동안 경영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규칙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동 고용주' 개념은 해당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권을 가질 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며 사용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한 바 있다.

1) The New York Times, "U.S. Judge Blocks Rule Extending Reach of Labor Law to Franchisers", 2024.3.11.

2) Reuters, "Judge Blocks US Labor Board Rule on Contract and Franchise Workers", 2024.3.12.

독일 : EU 공급망법, 연방정부 내 불협화음으로 좌초 위기

독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연정 협약에서 EU 차원의 공급망법 제정을 지지할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EU 공급망법은 이미 회원국 간 합의에 도달해 2024년 2월 9일 27개 회원국의 최종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유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과 마르코 부쉬만 연방사법부 장관은 "EU 공급망법이 현재의 형태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부담을 야기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정부 내 의견 불일치로 독일이 기권하는 경우 EU 회원국 내 다수결 확보가 위태롭게 된다. 이 때문에 EU 공급망법 표결은 무기한 연기되었다.¹⁾

환경 및 사회단체들은 EU 공급망법의 좌초는 인권과 환경보호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²⁾ 녹색당의 안나레나 베어복 연방외무부 장관은 자유민주당이 최근 여러 EU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EU 내 독일의 영향력 및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고 강조했다.³⁾ 사회민주당의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사회노동부 장관 또한 자유민주당이 이념적인 동기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일단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DIHK는 독일 국내법상 공급망법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EU 법률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일부 기업은 독일 기업이 타 국가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EU 공급망법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자유민주당은 EU 공급망법에 대해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

는 6월이 지난 뒤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협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예고했다.⁵⁾

- 1) Tagesschau, "Abstimmung zu EU-Lieferkettengesetz verschoben", 2024.2.9.
- 2) Tagesschau, "Berlin sagt in Brüssel immer wieder Jein", 2024.2.8.
- 3) EU 내에서는 독일이 연립정부 내 의견 불일치로 인해 기권표를 던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저먼 보트 (German vote)"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 4) Tagesschau, "EU-Lieferkettengesetz spaltet deutsche Wirtschaft", 2024.2.8.
- 5) Zeit, "Lindner will Lieferkettengesetz erst nach Europawahl neu verhandeln", 2024.2.13.

독일 : 철도 및 항공 분야 지속적 파업, 경기 타격 우려의 목소리도

2024년 상반기 독일 철도와 항공 부문에서 도이체반, 루프트한자 등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잦은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파업이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¹⁾ ifo 연구소의 클레멘스 푸스트 소장은 철도와 항공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부문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노동쟁의가 생산 및 근로현장에 불필요한 추가적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의 사전통보기간을 늘리는 등 노동쟁의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경제연구소(IW)의 경제학자인 미하엘 그렘링 교수 또한 전국적인 철도 파업으로 인해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9천만에서 1억 유로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노동쟁의를 비

판했다.²⁾

반면 파업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스 뷔클러 재단의 경제학자인 세바스찬 돌리엔 교수는 유연한 노동력 투입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파업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³⁾ 그는 독일 역사에서 파업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예는 1984년 금속 노동자들의 장기파업 외에는 없다고 보았다. 당시 서독 금속산업 노동자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약 7주 동안 파업을 벌여 자동차 생산량의 실질적 감소를 야기한 바 있다.

1) Tagesschau, "Gefährden Streiks den Wohlstand Deutschlands?", 2024.3.7.



- 2) Handelsblatt, "IW: Ein Tag Bahnstreik kostet bis zu 100 Millionen Euro", 2024.3.7. 그렘링 교수는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계산했는데, 도이체만 측의 손실 약 3천만 유로, 소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손실 약 3천만 유로, 그 외 공급망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통틀어 약 3천만 유로로 예상했다.
- 3) Handelsblatt, "Für die Gesamtwirtschaft irrelevant-Was der Bahnstreik kostet", 2024.3.6.

영국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방 수련의 파업으로 혼란 예상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수련의(Junior doctor)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웨일스의 수련의 파업은 영국 시간으로 2024년 2월 21일 오전 7시부터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런던의 파업은 2024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이루어졌다.¹⁾ 지난 1월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수련의 파업이 있었고, 그 결과 약 10만 건의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의료계는 2월에도 1월과 유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²⁾ 파업 기간 동안 제공되었던 의료 서비스 수준은 공휴일에 제공되는 수준과 유사했다.³⁾

수련의들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파업을 감행한 이유는 낮은 임금인상을 때문이다. 올해⁴⁾ 수련의

들은 약 9%의 임금 인상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추가 3% 인상을 두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1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수련의 파업을 주도한 영국의학협회(BMA)는 3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고 싶으며, 추가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MA는 2월 파업 이후 추가 파업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 중이다. 향후 영국 정부와 수련의들 간의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추가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⁵⁾

- 1) The Guardians, "Junior Doctors in England Offer to Call Off Strike if Given more Time for Talks", 2024.2.10.
BBC, "Three-day Junior Doctor Strike to Affect Thousands", 2024.2.20.
- 2) BBC, "Junior Doctors to Strike over Five Days, BMA Says", 2024.2.9.
- 3) BBC, "Three-day Junior Doctor Strike to Affect Thousands", 2024.2.20.
- 4) 회계연도를 따르고 올해 회계연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다.
- 5) The Guardians, "Junior Doctors in England Offer to Call Off Strike if Given more Time for Talks", 2024.2.10.
BBC, "Junior Doctors to Strike over Five Days, BMA Says", 2024.2.9.

영국 : 새로운 취업비자 법안으로 돌봄 산업 혼란 예상

작년 12월부터 영국 내무부는 취업비자의 개편을 예고해왔다. 2024년 초 취업비자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특히 돌봄 산업 내 간병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 노동자 수를 줄이고 비자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을 반영한다. 영국 정부는 개편안을 통하여 돌봄 산업 내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윤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 내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국내 인력을 늘리는 것이 다른 목표라는 견해를 밝혔다.¹⁾²⁾ 영국 의회는 이 개편안에 대한 법률 제정을 진행했으며, 3월 14일에 수정된 개편안 및 법률을 공개했다. 새로운 취업비자 법률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³⁾

그러나 취업비자 개편안에 대해 고용주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가정 간호 서비스 업체인 Grosvenor Healthcare CEO 대런 스타플버그는 취업비자 개편안으로 인해 고용 상황이 매우 극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간병인을 새로 고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간병인을 재고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벌써부터 일주일에 약 3천 건의 방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방문 간호 협회(The Homecare Association)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내무부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⁴⁾ 앞으로 돌봄 산업 내 고용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취업비자 개편안은 돌봄산업 내 종사자뿐 아니라 파트너 비자, 유학생 졸업 비자 등 다른 비자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20/>
- 2) Home Office, "New Laws to Cut Migration and Tackle Care Worker Visa Abuse", 2024.3.11.
- 3) House of Commons, "Changes to Legal Migration Rules for Family and Work Visas in 2024", 2024.3.14.
Home Office, "New Laws to Cut Migration and Tackle Care Worker Visa Abuse", 2024.3.11.
- 4) The Guardians, "UK Home Care Workers Cannot Work as Visa Regime Tightened, Says Employer", 2024.3.13.



프랑스 : 신임 총리, 새 정부 노동 관련 국정 기조 밝혀

가브리엘 아탈 신임 프랑스 총리는 2024년 1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 연설에서 새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노동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¹⁾ 아탈 총리는 보다 나은 임금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연대수당이 폐지되고 능동연대수당으로 대체될 계획이다.²⁾ 특정연대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로써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프랑스 고용지원 사무소를 대체한 프랑스 트라바이가 관리해왔다. 50세 이상의 구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수당액은 하루 기준 18.17유로, 월 545.1유로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에도 기준에 해당하면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 기준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 종료일 이전 10년의 기간 중 5년은 유급 고용 상태였던

자이다. 또한 2023년 4월 1일 기준 월수입이 개인의 경우 1,271.9유로, 결혼, 시민연대협약 또는 동거관계인 경우 1,998.7유로보다 적어야 한다.

특정연대수당과 능동연대수당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차후 은퇴연금 수급에 반영되는 노동활동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³⁾ 즉 6개월 동안 해당 수당을 받은 경우 은퇴연금 산정 시 2분기의 기간이 인정되지만 능동연대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연대수당의 경우, 월수입이 지원 대상 기준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능동연대수당의 경우 동반자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수입이 911.63유로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두 배 이상 엄격하다.

그 외에도 새 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20억 유로 상당의 감세, 정부 부채를 대상으로 주4일제의 실험적 도입, 중소·소형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⁴⁾

- 1) Franceinfo, “”Désmicardiser” la société française : que signifie cette formule de Gabriel Attal?”, 2024.2.1.
- 2) Franceinfo, “Chômage : qu’est-ce que l’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 que Gabriel Attal veut supprimer et remplacer par le RSA?”, 2024.1.30.
- 3) LeFigaro, “Fin de l’ASS au profit du RSA : quelles conséquences pour les chômeurs en fin de droits?”, 2024.1.30.
- 4) Gouvernement(2024), “Ce qu’il faut retenir d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Gabriel Attal”, <https://www.gouvernement.fr/> (2024.2.15).

프랑스 : 불법노동 감독 강화 ... 사회보장납부금 약 12억 유로 추가로 회수해야

프랑스 사회보험가족급여보험료징수조합이 2024년 3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불법노동에 부과된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총액이 한화 기준으로 약 1조 7,110억 원에 달하는 약 11억 7,7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그 전년도인 2022년의 7억 8,800만 유로와 비교해 약 50% 가량 증가한 수치다.¹⁾ 이는 약 6,800만 건의 일반의 진료에 대한 보조금과 맞먹는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보험가족급여보험료징수조합은 불법노동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정행위로 보면서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노동은 기업이나 개인이 노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액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분담금을 회피하거나 낮춰 납부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부를 면제받거나 적은 분담금을 내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2023년 불법노동에 부과된 총액 중 약 8억 1,400만 유로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명목이었고 약 3억 6,200만 유로는 분담금 면제 또는 축소분 등에 대한 재조정분이었다.

불법노동에 부과된 사회보장제도 분담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건설업 분야로 약 7억 1,600만 유로, 약 61%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용역 및 하청업 분야가 2억 7,000만 유로로 약 2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상업 분야가 4,940만 유로로 약 4.2%를 기록했다.

다만 적발되어 부과된 분담금과 실제로 거둬들인 액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가족급여보험료징수조합이 2023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약 7,960만 유로로 2022년 7,700만 유로와 비교해 조금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상당수의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납부 회피 등 불법노동이 지불 능력이 없거나 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²⁾ 이와 관련하여 채무 청산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불 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토마스 카베나브 프랑스 공공회계부 특임장관은 3월 13일 이러한 불법노동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는 2027년까지 불법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재평가액을 50억 유로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³⁾

1) URSSAF(2024), "Bilan 2023 de la lutte contre le travail dissimulé", <https://www.urssaf.org/> (2024.3.17).

2) Franceinfo, "Travail dissimulé : trois choses à savoir au record "historique" de la lutte contre le travail au noir en 2023", 2024.3.13.

3) BFM TV, "Travail au noir" : Record historique de 1,2 milliard d'Euros de redressement mais seulement 80 millions recouverts", 2024.3.13.



스페인 : 2024년 최저임금 월 1,134유로로 5% 인상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와 노동계는 2024년 14회 지급 기준의 최저임금(SMI)을 기존의 월 1,080유로에서 5% 상승한 월 1,134유로로 합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50만 명이고 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여성과 청년이다. 이 합의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스페인 경제인연합회(CEOE) 및 중소기업협회(CEPYME)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4.5%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¹⁾

정부는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부 장

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스페인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고, 필라르 알레그리아 교육직업훈련체육부 장관은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페페 알바레스 UGT 사무총장은 이번 인상이 청년과 여성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정부가 경영계와 협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을 처벌하는 식으로 인상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하여 스페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²⁾

- 1) El País, “Claves de la subida del SMI: 2,5 millones de personas, la mayoría mujeres y jóvenes, serán los principales beneficiados”, 2024.1.12.
- 2) El País, “El Gobierno aprueba la subida del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a 1.134 euros”, 2024.2.6.

스페인 : 2022년 바르셀로나 연평균 임금은 3만 3,837유로

2024년 2월 24일 바르셀로나 시청은 『2022년 바르셀로나 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 바르셀로나 임금현황을 다룬 이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와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구매력 변화와 임금 격차 등을 다룬 지역차원의 임금 관련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마

드리드와 더불어 스페인 경제의 중심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된 도시라는 점에서 스페인 노동 환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참조점이기도 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바르셀로나 주민의 연평균 임금은 3만 3,817유로, 평균 일당은 106.3유로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명목임금은 4.7%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 여파로 실질임금은 2.7%

감소했다. 보고서는 바르셀로나 주민의 연평균 임금이 바르셀로나 근교 주민보다 6.2%, 카탈루냐 자치주 주민보다 15.4%, 스페인 전체 평균보다 26.4% 더 많다고 밝혔다.¹⁾ 이와 관련하여 일간지 『엘 파이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여성의 평균 급여는 3만 693유로로 남성의 평균 급여 3만 7,003유로보다 17% 적다. 또한 『엘 파이스』는 행정구별로도 임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사리아-산트게르바시 구 주민(5만 4,999유로)은 노우

바리스 구 주민(2만 4,785유로)보다 평균 두 배의 연 소득을 거둔다. 평균보다 소득이 많은 행정구는 네 곳(사리아-산트게르바시, 레스 코르트스, 에이샴플레, 그라시아)으로 주민 62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며, 나머지 여섯 행정구(산트 마르티, 오르타 기나르도, 산트 안드레우, 산스 몬주익, 시우타르타 베야, 노우 바리스)의 주민 100만 명은 평균보다 연평균 임금이 낮았다.²⁾

1) Ajuntament de Barcelona(2024), “Els Salaris a Barcelona 2022”, <https://bcnroc.ajuntament.barcelona.cat/> (2024.3.20).

2) El País, “33.837 euros brutos al año: el salario medio de los vecinos de Barcelona”, 2024.2.24.

일본 : 도쿄 고등법원, 요양보호사 노동 문제 항소 기각 및 불안정 노동환경 인정

2024년 2월 2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현직 방문 요양보호사 3명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각각 3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인 후지와라 루카(68세), 이토 미도리(71세), 사토 마사코(68세)는 요양보험 제도가 제공하는 요양 보상의 낮은 수준, 휴업수당 미지급, 이동 및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일본 정부가 노동 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¹⁾

고등법원 판사는 사업자의 경영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한 일본 정부의 요양 보상 결정방식이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보건복지 행정에 법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이로 인한 만성적 인력 부족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²⁾

항소가 기각되었음에도 판결이 방문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노동환경을 인정한 것은 원고 측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법적



투쟁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³⁾

- 1) 朝日新聞, 「ヘルパー3人の国賠訴訟、控訴棄却でも原告は前向き評価 そのわけは」, 2024.2.2.
- 2) 週刊金曜日, 「ヘルパー国賠訴訟の控訴審判決、原告側主張を一部認めるも国の責任認めず」, 2024.2.13.
- 3) 東京新聞, 「「崖っぶちの介護保険に踏み込んでくれた」訪問介護ヘルパーの国賠訴訟、敗訴も東京高裁が問題点に言及」, 2024.2.2.

일본 : 이와테현 쿠지시청,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주4일제 시도

이와테현 쿠지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4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내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데,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 엔도 조지 시장은 이 정책을 통해 주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육아, 간병,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¹⁾

시범 운영은 부서별로 1~2개 과에서 실시되며, 약 600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한 주에 3일을 쉴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 근무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

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정규직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근무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 3일은 2시간, 1일은 1시간 45분 더 일하여 주중 하루를 휴일로 확보하게 된다.²⁾

쿠지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 근무제의 본격 도입과 함께 탄력 근무시간제, 원격 근무 등 더 유연한 근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난해 대비 올해 직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 수 감소 및 합격자 이탈 등 인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야간에 열리는 주민 설명회나 행사로 인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시 총무과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직원 채용 시 강조될 예정이다.³⁾

- 1) NHK, 「久慈市が週休3日制を5月から試験的に導入」, 2024.3.5.
- 2) 読売新聞, 「久慈市週休3日制に 5~8月 試験導入」, 2024.3.5.
- 3) 朝日新聞, 「少し長めに働いて週休3日実現へ 内定者辞退も相次いだ市役所の試み」, 2024.3.20.